

산업정책의 허상 “ 벤처정책 ”

한때, 아니멀지도 않은 1999-2000년 한국사회는때아닌억만장자 탄생으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든 적이 있다.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정책에힘입어 IT를 필두로수많은벤처기업이탄생했고, 증권투자자들의묻지마투자가가세하면서액면가 500원 주식이 30만-40만원에거대돼대주주들이억만장자의대열에오르는등기염을토했기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현재는어떠한가? 벤처기업들은 2001년부터자금줄이말라부도직전에와있고, 스스로문을닫거나벤처대열에서 탈락한 벤처기업이 부지기수이다. IMF 경제위기이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떠올랐던 벤처기업들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2002년 하반기쯤에는 벤처기업이 무더기 도산하는 벤처대란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을 정도이다.

벤처기업수는 2000년 말 1만1392개를 정점으로 2001년 말 1만182개로줄었고, 2002년 7월말에는 9800-99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도 크게 줄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선 금액은 2002년 1-6월 1조200억원(113개)으로 2001년 1-6월의 1조700억원(221개)에비해크게감소했다.

왜그러할까? IT경기가위축되고주식시장이침체에빠져벤처기업들이 돈가뭄에시달리고있는 것일까? IT 경기가한풀췌이고주식시장이하락세를보이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단연코2가지요인만은아닐것이다. 화려하게위장한포장이한풀한풀벗겨지면서보잘것없는속살이한꺼풀두꺼풀드러나더이상관심의대상이되지못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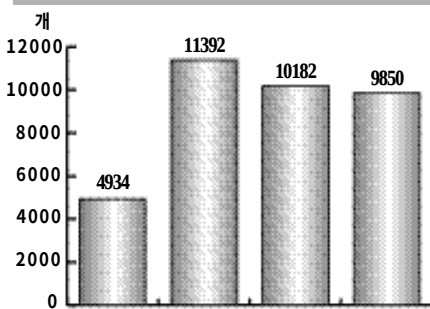
그러한벤처기업육성정책의중심에는바로산업자원부가있다. 1998년IMF 위기당시산자부가입안하고청와대가강력하게지원한것이바로벤처정책이다. IMF에따른실업난을타개하고, 재벌을견제하며, 새로운IT산업을부흥시킬수있는정책이었으니일거양득이아닌일거3득의기발한아이디어로평가됐을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벤처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논란이여거저기에서 번졌고, 정부가 거품을 조성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제기됐다. DJ정부들어산업정책중가장큰오류를범한것중하나가8대산업구조조정을추진한당시추진한Big Deal이고, 또다른 하나가 건설경기를 살린당시고 부동산 거품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친 것이며, 다른 하나가 바로 벤처거품조성이었을것이다.

산자부가벤처기업육성정책을추진한당시그동안국민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는알 수 없으나 2-3년 동안물 쓰듯 평평 낭비한 국고가아마도 수조원에달할것이다. 콩고물인지떡고물인지에맞들여 검증절차도없이평평퍼주기를3년이넘게실시했지만, 벤처기업들이 추풍낙엽 신세로 전락한 오늘날 정책 입안 및 집행에서의 오류나 고의성으로 처벌받거나 사직한 고위공무원은 단 한명도없는상태이다.

그리고는 이제와 벤처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해 벤처지원 담당부서 기능을 축소하고 있다고 한다. 벤처정책팀을 아예 없애고 산업기술과에 편입시켰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각종 벤처지원위원회의 명칭에서도 벤처 이름을 빼버렸다고 하지 않은가. 중소기업청은벤처기업확인을받은 8920사를대상으로혁신능력평가를 실시해부실판정이내려진 130여사에대한벤처확인을8월부터취소할방침이라고 한다. 벤처확인이취소되면세제혜택, 병역특혜, 정책자금우선지원, 자금대출때가산점부과등의혜택을받을수없게돼벤처로서의운명은끝나게된다.

벤처기업 활동현황



* 추정치

바로 중앙정부 경제부처들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조직을 재편해야 하는 이유이다. 거품을 조성하고콩고물받아먹는재미가아니라 국가와 산업의비전을 생각하고 실행하는경제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평평 낭비하면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산업정책의 정도인양 거들먹거리는꼴은보기에도사납다.

숲을보지못하고나무만볼수있는우물안개구리의 정책으로는국가산업의 비전을 생각할 수 없고, 거시경제정책의 기틀이 없는 미시경제정책으로는 벤처거품을양산할수밖에없다.

다음정부는조각에앞서정부의경제부처를재편함으로써조직의효율성을 제고하고산업비전을재설정해야할것이다.